

미래차 경쟁력 확보에 5000억 투입

산업부, 올 예산 4990억 지원
R&D·신규과제 4326억 할당

희토류 의존도 낮춘 모터 개발
배터리 안전성 초격차 기술 등
미래차 핵심기술 육성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친환경·자율주행 등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 등에 4990억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4425억원 대비 12.8% (566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는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불확실한 통상 환경과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공급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총 4326억원을 자율주행,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이 중 644억원은 신규과제에 할당했다. 이에 14일 1차 신규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7개 품목(세부과제 40개)에 385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 융합을 통해 '3-제로(사고, 운전자 개입, 기

〈2025년 자동차 분야 지원 예산〉

분야	2024	2025	증감율
친환경차	2363억원	2328억원	△1.5%
자율주행차	1562억원	1997억원	27.8%
기반구축	500억	665억	32.9%
합계	4425억원	4990억원	12.8%

/산업부



챗GPT에 의해 생성된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 이미지.

솔격차 없는'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차 모터의 자석 대부분은 수입산 희토류를 원료로 제조하고 있는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를 개발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2개의 모터 동시

구동시스템 △구동과 전력변환 부품 5종을 1개로 통합하는 기술 △12극 이상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배터리 화재 이후엔 열전이를 20분 이상 지연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활용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5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9개 신규 편성해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올해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 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과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오른쪽 세번째)이 '제9차 KOSPO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부발전

“무탄소 에너지 전환 방안 마련할 것”

남부발전 '탄소중립녹색성장' 김동준 “新동력, 전사 역량 집중”

한국남부발전이 신규자문단을 꾸려 무탄소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12일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경영진과 외부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KOSPO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김준동 사장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CCS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신규 자문위원들과 함께 무탄소 신기술을 활용한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권이균 공주대 교수가 '국내외 CCS 현황과 기술 경쟁력'을 주제로 발제했다. 권 교수는 "CCS는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한 옵션 중 하나

라며 "수소 및 수소화합물 혼소·전소 등 신기술과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탄력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사내·외 자문단은 국내외 기후·에너지 정책 동향, 기술개발 수준, 세계 에너지 시장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화력발전소를 미래에도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써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김준동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발생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남부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화력발전소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최적의 무탄소 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20개사 제재

공정위, 동성사·한샘 등 적발
190건 입찰서 사전 협의·실행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작용”

주요 건설사들이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20개 가구사들이 10년 이상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개 시스템가구 납품사들이 2012년 2월 ~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협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가구사는 넥스디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자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널·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강크라징이다.

공정위는 이들 중 가담 입찰 건수가 적고 단순 들러리로 참여한 넥스디 디자인그룹·넵스·라프시스템·한샘넥서스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영일산업(33억2400만원)·자마트(15억9300만원)·한샘(15억7900만원) 순이다.

또 담합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협



20개 가구사들의 순번제 합의 증거

/공정위

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자마트·한샘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가구사 영업 담당자들은 건설사들이 전국 각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가격을 협의해 실행했다.

또 향후 진행될 다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 방법을 동원해 정했고,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여자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2010년 전후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 다양한 업체들이 진입하며 가격경쟁이 심화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입찰 담합은 앞서 '내장형 특판 가구 입찰담합 건(2024년 4월)',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2024년 10월)'에 이은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사건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 가구건만 보면 평형에 따라 55만원 ~ 350만원의 시공 비용 중 일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충북도 고병원성AI 방역실태 특별점검

농식품부, 가축방역상황실 등 방문
차질없는 검사·내외부 소독 등 지시

정부가 충북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에 대한 현장 관리에 돌입했다.

충북 지역에선 지난 설 명절 마지막 날인 1월30일부터 2주간 가금농장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음성과 진천에서만 이번 동절기에 각각 3건의 양성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발생 위험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방역상황 점검에 나섰다 13일 밝혔다.

농축산식품부의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충청북도 가축방역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충청

북도는 위험 사·군 일제 검사, 축산차량역학 최소화 조치, 2주간 1일 2회 농장 내·외부 소독 시행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란계와 오리농장에서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이달 3일부터 국내 가금류농장 고병원성 AI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정부에 보고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별 차단방역 추진 상황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음성과 진천 가금 농장 현장점검반 운영 ▲미호강 등 철새도래지(9개소)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수 1위 '북한산'

2위 지리산, 3위 무등산 順
오대산 증가폭 최고, 32% ↑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관리 중인 산(山) 가운데 9곳이 탐방객 수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 3대 명산 중에는 지리산(2위)과 설악산(5위)이 9위권에 들었다. 한라산은 10위에 올랐다.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2024년도 국립공원 산 중 탐방객 수 1위는 북한산이었다. 699만 명이 찾았다. 2위는 지리산(376만 명), 3위는 무등산(241만 명), 4위는 계룡산

(232만 명), 5위는 설악산(210만 명), 6위는 내장산(204만 명)이었다.

이어 오대산(164만 명), 속리산(126만 명), 덕유산(111만 명)이 각각 7, 8, 9위에 자리했다. 한라산(10위·93만 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오대산의 경우, 작년 탐방객 증가폭이 국립공원 중 가장 컸다. 2023년(124만 명)에 비해 32% 늘어났다. 특히 오대산 명소인 월정사 방문객 수는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폐지 덕분에 전년 대비 40만 명 증가한 147만 명에 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